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평가

손 기 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표현: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2007년 5월 8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3일간 예정되었던 회의는 하루를 넘겨가며 진행되었고, 그 결과 쌍방은 남북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발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첫째,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 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고,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넷째,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북측표현: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을 통해 열차 시험운행이 군사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실로 50여년 만에 남북 간의 철길이 이어지게 되었다.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남북은 남북 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로 개방하기로, 열차 속도를 20~30킬로미터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실상 북한 군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이번에 북한의 군부가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한 이유가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제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열차 시험운행의 성사를 조건으로 이미 세부일정에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 사업을 군부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5월 2~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을 통해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 차원에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광산 3곳(검덕광산: 아연, 룡양광산: 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또 우리 측은 올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분 중 1차차 분(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6월 27일 제공하

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꽃계철 등 어로기에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어로 문제에서 북한은 애초 ‘공동 수역’이라는 민감한 표현을 제기했으나, 남측 제안대로 ‘공동어로수역’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7월에 6차 장성급회담을 열기로 하고, 2000년 9월 이후 중단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도 남북 ‘군 당국 간 대화 창구’를 지속·격상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군사회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먼저 열차·도로통행 군사보장문제가 예상대로 17일 시험운행에만 한정된 1회성 ‘잠정합의서’로 결론이 났다는 점이다. 우리가 요구했던 항구적인 군사적 보장합의서 채택문제가 차기 회담으로 넘겨져 이번 회담이 미봉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남북 군당국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게 되었다.

다음으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한 군사보장 대책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측이 요구한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항구적 군사보장과 한강하구 골재채취,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등은 공동어로 실현, 특히 북측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해주항 직항 등의 진척과 맞물려 ‘주고 받기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해주항 직항 문제는 북측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측은 제3차, 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이를 요구했었다. 이번 회담에서도 우리 측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한 이 문제는 북측의 선택이 서해 해주항으로 직항하려면 연평도 쪽 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거듭될 것이다. 해주 직항로의 요구가 화물운송 시간 단축, 유류비 등 물류비용 절감을 노린 경제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란 설명도 있을 수 있으나, 직항로 요구가 장기적 측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보다 현실적 일 것이다.